

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공무원들 강한 반발에 상정 보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에게 공무원 인사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상정이 보류됐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해당 인사규칙 개정안은 등 앞서 지난 2월 28일 제373회 임시회에서도 상위법 위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앞서 인사규칙 개정예에 따른 상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의견제시를 했고 그 결과, 법제처로부터 규칙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양우식 도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회 의회운영위원들은 다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기도정 공무원 노조의 반발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회운영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개정안 상정이 불발된

교섭단체 대표의 인사위원 추천 담겨

도청 공무원노조 "인사권 침해" 비판

회의규칙 개정안도 여야 이견에 불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사규칙 개정안에는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인사위원 후보자를 도의회 의장이 임명·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의회 인사위원회가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는 이같은 인사규칙 개정을 "인사권 침해"라고 규탄하며 지난 2월부터 수차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노조는 인사규칙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노조의 강한 반발에 도의회 의회운영위 소

속 여야 위원들은 인사규칙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밖에 도의회 의장 선거 절차·규정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도의원 대표 발의)도 여야 위원들이 이견을 보이며 상정이 불발됐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회운영위원들은 이날 보류된 안건들을 추가 검토해 오는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6월 11~27일)에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나규환 기자

‘김동연 초청’ 라오닝성 당서기, 한중관계 ‘물꼬’ 트고 귀국

道·라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 체결

코로나 이후 첫 중지방 당서기 방한
한덕수, 어선 불법조업 등 관심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하오펑 중국 라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하오펑 당서기에 라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돼 양국 교류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이에 하오펑 당서기는 해당 사안들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이번 하오펑 당서기의 방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인연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 지사 중국 출장 당시 두 사람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네택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하오펑 중국 라오닝 당서기가 악수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를 풀고 만나자'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 하오펑 당서기는 전날 '노타이'에 남색 정장차림으로 경기도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수원 도담소에서 '경기도-라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를 체결한 뒤 통탄거리로 자리를 옮겨 편안한 분위기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경제무역 협력 의지까지 여러 분야에 걸친 공감대를 확인하

고 향후 미래세대 교류 등 더 다양한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돈독해진 우정으로 양국 협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하오펑 당서기도 "도와 우정, 경제통상,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교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또 하오펑 당서기는 이번 한국 출장 중 삼선전자 방문 일정에 김 지사의 도움을 받았으며 오는 6월 다보스포럼과 9월 라오닝성 국제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초청하기도 했다.

하오펑 당서기는 같은 날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라오닝성에 투자하길 희망한다며 라오닝성 개방정책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원자재 등 공급망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이번 하오펑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유림 기자

도의회, 다락성 인민위와 국제교류 협력 '맞손'

(베트남)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제안 등 논의
문화·관광 등 다분야 교류활성 기대

경기도의회는 25일 베트남 다락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오준환(국힘·고양9) 도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베트남 다락성 인민위 보반칸 부위원장 등 대표단 10여 명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이날 경제 교류 강화를 희망하는 다락성 인민위 대표단에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협력 방안을 적극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준환 의원과 새고양시관광협의회 관계자들은 앞서 다락성 인민위에 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을 공식 요청하기 위해 지난달 다락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의장은 "도의회는 전 세계 7개 국가 11개 지역위원회와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다"며 "지난 해는 친선연맹지역인 베트남 응에안성과 하남성을 상호 방문하는 등 성공적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락성에서 경기도 및 도의 우수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오준환(국힘·고양9) 도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베트남 다락성 인민위 보반칸 부위원장 등 대표단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기업들과 투자 유치 설명회를 실시하길 제안하며 도의회도 양측의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다락성과 의회 간 교류의 물꼬가 트이게 돼 반갑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기관 간 교류가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보반칸 부위원장은 "다락성은 커피, 나무 등 다양한 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다락성의 농산물 수출과 관광 분야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

나규환 기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통해 지역경제 살리는 경기도

경기도는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 극복·역량 강화를 통해 상권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3주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진행했다. 총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공모 분야는 크게 ▲신규 조직화(1년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차) ▲골목공동체 대협력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신규 조직화 등 5개 분야 공모 완료
총 228개소 선정, 25억 원 투입 예정
상권 자생력 키워 경제 활성화 기대

등 5개다. 신규 조직화는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공동마케팅 ▲공동시설환경개선 ▲선진지견학 ▲회의비를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분야다.

최종 10개소를 선정해 상권 1개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성장지원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화 2년차 이상된 상권들을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다. 최종 200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500만 원 내에서 사업과 비용을 제공한다.

우수골목 조성은 성장지원을 거친 공동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인 역량강화교육부터 상권 홍보·판매촉진, 행사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을 돕는다. 총 6개소에 1억 원을 투입한다.

특성화 사업은 시설 개선, 콘텐츠 개발, 상인 네트워크 조성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2개소를 선정, 1개소당 8억 원을 지원한다.

대협력업은 지역대학(미술·예술전공 등)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하는 사업으로, 총 10개를 선정해 1곳당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별 소상공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골목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근 기자

대법원, 김보라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각

(안성시장)

비서실장·공무원 2명도 무죄 유지

김보라(사진)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25일 검찰이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관련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떡 등을 1398명의 시청 직



원에게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두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

한편, 김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과 공무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이 내려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정성우 기자

똑버스, 부천 고강본·옥길동서 5대 달린다

매일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 운행

일반 시내버스 요금 1450원과 동일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경기도 '똑버스'가 부천시 고강본동·고강1동, 옥길동·범박동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경기교통공사는 25일 부천시 고강본동 일대에서 조용의 부천시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해 서영석 국회의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똑버스' 시승 행사를 가졌다. 이날부터 고강본동·고강1동, 옥길동·범박동 일대에는 똑버스 총 5대가 운행된다.

13인승 쉼라티 3대(고강본동·고강1동), 23인승 뉴 카운티 2대(옥길동·범박동)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호출마감은 오후 10시 30분이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450원으로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이번 신규 운행 똑버스는 지난 23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행을 진행하며,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원종역, 역곡역 등 지하철뿐만 아니라 각 구청까지 연계해 부천시민들의 이동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부천 똑버스까지 포함해 도내 12개 시군에서 똑버스 149대를 운행 중이다.

이근 기자

GH, 통합공공임대주택 320호 첫 공급... 최장 30년 거주 가능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안성시 당왕동 일원에 소재해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하며, 대형마트나 안성병원 등이 가까운 중심지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320호로, 이 중 100호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창업지원주택)으로 1인 창조기업·창업자 등을 대상으

안성 당왕동... 산업단지·병원 근접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등 신청

로 한다. 나머지 220호 중 60%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우선공급하고 40%는 일반공급한다. 거주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신청은 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다음 달 20~23일, 나머지 220호는 27~30일 현장·우편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입주자격은 소득·자산기준 중위소득 150%, 총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해당 기준은 임대주택 유형별로 복잡했던 기존 입주자격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다만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다르고, 임대조건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GH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근 기자

